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 -

2025. 1. 14.



산업통상자원부

순서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1. 주요 정책성과	1
2. 평가	2
II.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1. 추진 여건	3
2. 추진 방향	4
III. 2025년 핵심 추진과제	5
1.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5
2. 수출·외국인직접투자 상승모멘텀 유지	7
3.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9
4.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13
IV.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5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역대 최대 수출과 외국인 투자 달성

- (수출) '22년(6,836억불)에 이어 '24년 역대 최대 실적(6,838억불) 달성
 - '24년 10대 수출국 중 성장률 1위(1~9월 WTO 기준, 9.6%)
 - 해외플랜트 수주 341억불 달성(9년만에 최대 성과)
- (외투) '23년 327억불, '24년 346억불(신고)로 최대실적 지속 경신
- (통상협정) 총 6건의 신규 협상 타결* 및 필리핀 FTA 발효('24.12)
 - * 과테말라'23.9.에콰도르'23.10.IPEF'23.11.UAE'23.10.GCC'23.12.조지아'24.11
 - 총 22건의 FTA 발효로, 전세계 GDP 85%의 경제운동장 확보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입지) 12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투자계획 717조원) 지정·지원*
 - *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 지원 → 용인 1호 팜 부지조성률 85% 돌파('24.12 기준)
- (세제·자금) 투자세액공제(최대 25%), 반도체 종합지원(26조원) 등
- (법령) 「첨단인재특별법」('24.1) 제정, 「반도체특별법」 본격 추진

□ 지역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 (기회발전특구) 모든 14개 비수도권 시·도 지정 완료(투자계획 74조원)
- (산단혁신) 킬러규제* 효과, 문화·편의시설 확충('22~'24, 3조원 투자)
 - * 수직농장·이차전지소재 업종 입주허용, 공장 신·증설시 유희부지 한시적 임대 허용 등
- (법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23.7) 제정으로 지방시대 기반 마련

□ 무탄소에너지 보급·활용 확대

- (전력시장) 증가하는 무탄소e 수용을 위한 시장개편 추진
 - * 직접 PPA('22), 배터리ESS 중앙계약시장('23), 재생e입찰·실시간시장('24, 제주) 등 도입
- (전력망)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승인('24.2), 제주3연계선('24.9), 북당진-신당정('24.11) 등 '24년 72개 사업 준공('22년 대비 2배 이상)
- (재생e) 해상풍력 입찰시장 개설('22.10), 산단태양광 개발지원 등 '30년까지 연평균 6GW 내외 보급 기반 마련
- (수소)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3), 세계 최초 청정수소입찰시장 개설('24.5), 수소 특화단지 지정('24.11, 2개소) 등 생태계 조성 추진

□ 원전 생태계 강화 및 수출성과 시현

- (생태계) 신한울 1·2호기 준공('24.4) 및 3·4호기 착공('24.10), 일감·금융 등 다각적 지원(원전 업계 매출: '21. 21.6 → '23. 32.1조원)
- (수출) 체코 신규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7)

2 평 가

□ 산업·통상·에너지 등 쏠 분야에서 계획된 성과 달성

- 역대 최대 수출·외투 실적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 원전 정상화 및 전력망 확충 등 중장기적 성장기반 구축

□ 다만, 국내 정치상황, 미국 新행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

- 성장동력인 수출 모멘텀 약화에 적극 대응 필요

II.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 미국 新행정부 출범 등 통상·산업환경 급변

- 보편·상호관세 추진시 우리 對美 수출에 악영향, 제3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우려
- IRA 축소·폐지 논의 등으로 對美 투자 사업의 불확실성도 확대

□ 글로벌 공급과잉 등 수출여건 악화

- 중국 등의 철강·석유화학 저가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차·배터리 등 여타 품목으로 확대 가능성
- 핵심 품목인 반도체(DRAM, NAND) 단가 하락, 자동차 對美 수출 감소,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 감소 등 우려

□ 주력산업의 위기감 확산

- 중국의 반도체·AI 등 첨단분야 기술투자 확대로 韓-中 산업기술 격차 지속 감소('19. 0.5년 → '23. 0.3년)

* 한·중 첨단기업 R&D('13→'23, 억달러): (韓) 292 → 510 (中) 384 → **2,051**

-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환율상승 등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위축되면서 향후 투자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

* 기업경기실사지수(한경협): ('24.12) 97.3 → ('25.1) **84.6** (코로나('20.4) 이후 낙폭 최대)

□ 에너지분야도 원전 수출, 심해가스전 시추 등 현안이 산적

- 체코 원전 최종 계약('25.3, 예정), 동해심해가스전 시추('24.12 개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수소·전기 등) 등에 차질없는 대응 필요

2 추진 방향

비전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

분야별 목표

- ▶ **[통상]**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 ▶ **[무역·외투]** 수출·외투 상승모멘텀 유지
- ▶ **[산업]** 주력산업 위기 돌파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 ▶ **[에너지]**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

- ▶ 미국 新행정부 대응체계 구축
- ▶ 對美 아웃리치 총력 전개
- ▶ 신규 협정 등 경제운동장 확대
- ▶ 무역구제 역량 강화

수출·외투 상승모멘텀 유지

- ▶ 무역보험 252조 역대최대 공급
- ▶ 수출마케팅, 물류비 지원 강화
- ▶ 국제투자대사 등 투자유치 총력
- ▶ APEC 성공개최로 신인도 제고

산업위기 극복과 신산업 육성

- ▶ 「반도체법」 제정, AI 반도체 개발
- ▶ 전기차·이차전지 캐즘 극복
- ▶ 공급과잉 업종 사업재편
- ▶ 산업 AX와 로봇·바이오 육성

에너지 현안 완수

- ▶ 11차 전기본 확정, 에너지3법 통과
- ▶ 체코원전 완수, 심해가스전 추진
- ▶ 시장·요금 등 에너지시스템 개편
- ▶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강화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① 정책 여건

□ 미국 新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 확대

-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 구체화시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 불가피
- 바이든 정부 보조금(IRA·CHIPS법) 변경·폐지시 對美 투자에 악영향

□ 미-중 갈등 심화로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 격화 전망

- 글로벌 공급과잉 물량의 국내 유입과 제3국에서의 경쟁 심화
- 주요시장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의 연쇄적 확산도 우려
- 공급망 분절화 및 블록화 심화로 인한 시장 위축 전망

② 대응 계획

□ 미국 新행정부 출범 대응

① 대외경제현안 간담회(권한대행 주제) 상시 운영

- 상황·이슈별 대응전략 수립 및 부처별 역할 부여
-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對美 무역수지 대응논리 준비
-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등 협력의제 발굴('범부처 조선 TF' 구성·운영)

②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 산업부 장관 訪美 아웃리치('25.1)
- 주요국(일·EU·캐·맥 등)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 민간 네트워크 적극 활용

□ 경제운동장 지속 확대

○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로 수출·투자·공급망 다변화

↳ 남반구 또는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개도국을 통칭

* 핵심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 ODA 예산 확대('24년 907억원→'25년 1,326억원) 등

** TIFP는 현재 29개국 체결 → 40개국 이상으로 확대

○ 유망 신흥국과의 통상협정(FTA 또는 EPA) 협상 가속화

* 협상 진전 말련·태국·몽골·방글라데시·세르비아, 신규 개시 파키스탄^{1월}·모로코^{'25.1} 등

○ 既타결 통상협정의 연내 발효 추진

* GCC, UAE, 과테말라, 에콰도르 등 4개 FTA 발효시 경제운동장 2.2% 증가

□ 신통상규범 대응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美 해외오염관세(FPPA) 등 탄소규제 및 공급망실사·디지털제품여권 관련 기업 대응 역량 제고

○ 글로벌작업반을 통해 CFE 국제 인증제도 마련, APEC 정상회의·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을 통한 CFE 국제 확산 가속화

○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추가 가입 협상*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장

*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페루 등의 추가 가입협상 진행중

□ 무역구제 역량 강화

○ 무역위원회 전면적 확대개편

○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PMS, AFA 등),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1.1일)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별시장상황),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

* 무역협회·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대응역량 강화 등

2 수출·외국인직접투자 상승모멘텀 유지

1 정책 여건

□ 주력 품목의 수출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

업종	'25년 수출 여건
반도체	▶글로벌 수급 요인으로 2분기까지 D램, 낸드 단가 하락 전망
자동차	▶전기차 캐즘 지속,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석유제품	▶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
유화·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탄소규제 등 통상 리스크 확대

□ 기저효과까지 겹쳐 특히 상반기 수출이 어려울 전망(“상저하고”)

- 환율 상승, 물류비 증가 등 수출기업들의 현장애로도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상승모멘텀 제약

2 대응 계획

□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책역량 총동원

① 역대 최대 무역보험 252조원 지원(‘24년 실적 237조원)

- 중소·중견기업 지원 100조원 돌파(‘24년 97조원) 및 우대보험 확대
 -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50% 할인 연장(~’25.6)
 - 수출신용보증(제작자금 대출, 수출채권 현금화 지원 등) 확대(4.5→5조원)
- 수입자금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2.8→3.0조원)하고, 개별 기업의 보증한도도 최대 150%까지 상향
- 환변동보험 지원규모 1.5조원으로 증액, 보험료 특별 할인(30%)
- 원전·방산·플랜트 등 중장기 보험·보증 확대(‘24. 18.3 → ‘25. 20조원)

②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상반기에 70% 이상 집행)

- 전시·상담회(289→305회), 무역사절단(10→12회) 역대 최대규모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발급 확대(567 → 616억원)
- CES·MWC 등 통합한국관 구축, 오사카 EXPO 계기 한류마케팅

③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강화

- 물류 전용 바우처 신설(50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283 → 300개), 'K-물류데스크' 신설(LA·암스테르담·싱가폴·상하이) 등 수출 물류 지원
-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신시장·유망품목 상호인정협약 확대
 - * 현재 누적 200 → 210건으로 확대(의료기기(獨)·생분해 플라스틱(豪)·완구(베) 등)
- 초보·내수기업 대상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강화(1,000→1,500社), '디지털무역지원센터' 확대(국내 15 → 20개소)

◆ 2월 「부처 합동 비상수출대책」 발표 예정

□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모멘텀 유지 : '25년 350억불 유치 목표

- 전략적인 아웃리치 전개
 -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 개최
 - 국제투자협력대사 중심으로 주요 투자국 중심의 IR 활동 전개
 -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집중 유치
 - * (미국) 반도체·인공지능·로봇 (일본) 첨단 소부장 (유럽) 제약·바이오·화학 등
- 획기적인 외투 인센티브 도입
 - 한시적으로 현금지원한도 최대 75%까지 상향하고, 관세감면 기간도 기본 5년 → 최대 7년으로 연장
 - 비수도권 국비분담비율 60% → 70%로 상향, 외투기업 대상 대출우대, 외투촉진펀드 신설 검토
- 성공적인 APEC 경제인행사 개최 및 이와 연계한 투자유치 추진
 - * APEC CEO Summit 및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Invest Korea Summit 연계 등

3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1 정책 여건

□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감 고조

- 각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지원중, 캐즘 등으로 전기차·이차전지 사업여건 악화

* (美) CHIPS Act('22), IRA('22) 시행, TSMC(66억달러)·삼성전자(47억달러) 보조금 지급
(日) AI·반도체에 10조엔 지원('24.11) (中) 반도체펀드 조성 통해 3,440억위안 지원('24)

- 철강, 유화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 '25년 글로벌 생산능력/수요 전망 : (철강) 26억톤/18억톤 (에틸렌) 2.4억톤/1.9억톤

□ AI, 로봇, 바이오 등 유망산업의 생태계도 여전히 취약

- 산업 전반에 AI를 확산하고, 휴머노이드·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플랫폼 경쟁에 대비할 필요

- 바이오는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 개발·생산*에 강점이 있으나, 소부장 등 생태계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부족**

* 美 FDA 바이오시밀러 허가건수 2위('24) ** 원·부자재의 95% 이상 수입에 의존

2 대응 계획

□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 세액공제율 상향(+5%p) 등 인센티브 확대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가속화(용인 1호 팹 1분기 착공)
-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 착수('25.上, 1조원 규모 예타 신청)

자동차

-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25.1)
- 자율주행 통합기술로드맵('25.上) 및 부품생태계 전환계획('25.下) 수립

이차전지

- 「사용후배터리법」 제정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 * 유통·재사용 사업자 등록제도,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도 등
- NCM 성능 고도화 및 LFP 등 기술개발 집중 지원

조선

- LNG 운반선 이후의 차세대 먹거리 육성방안 마련('25.下)
 - *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 R&D·실증·사업화 등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5.上)

□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

- 업계 자율 컨설팅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본격 추진
-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산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하고 고부가·친환경소재 투자 강화('2530 R&D 로드맵' 수립, '25.上)

철강

- 업계와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가동('25.1~), TF 논의사항을 반영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5.上)
 - * 통상리스크 대응, 그린철강 전환, 핵심·고부가 품목 R&D 투자 등
-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26~'30, 약 9천억원) 예타 마무리('25.上)

□ 유망 新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 AX

- '산업 AX 확산 전략' 발표('25.1분기)
- 자율제조, R&D, 디자인, 에너지 등 AX 선도프로젝트 60개 추가 선정('24. 26개 자율제조 → '25. 60개 자율제조(35)+R&D(10)+디자인(7)+유통(5)+에너지(3))
- '산업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밑그림(ISP) 완료('25.上)

로봇

- 전용 AI모델 개발, AI 융합부품 등 휴머노이드 R&D에 집중 투자*, 휴머노이드의 제조현장 진입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 '25~'28 1,000억원 이상 투자 ** 산업안전보건법: 현재 휴머노이드 산업현장 활용 불가
- 산업·서비스 로봇의 실증 인프라 구축(2,000억원, '24~'28, 대구)

바이오

- AI를 접목하여 바이오 연구* 및 제조** 혁신 추진
*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25~'29, 1,263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가칭 K-Bio Manufacturing Initiative 사업('25.上 예타 신청, 총 7천억원 규모(잠정))
- 80개 바이오 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한 수요 연계형 R&D 추진

□ 산업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기술 보호

- '공급망 핵심품목' 3R R&D 예타 추진('25.上)
↳ 대체(Replace)-저감(Reduce)-재활용(Recycle)
- 경제성 부족으로 국내생산이 어려운 품목 생산* 및 수입다변화** 지원
*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국내생산, 구매촉진 지원
** 차량용 요소 : 중국 외 제3국에서 수입시 단가 차액 50% 보조('25년)
-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25.上)
*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 및 보유기관 등록제, 벌칙강화 등

□ 산업 R&D 혁신 및 국제표준 활동 강화

- 초격차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규과제의 85% 상반기 선정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본격 착수('25. 50억원)
 - 전세계 기술·인재를 연결·활용하는 글로벌 개방혁신 시스템 가속화
 - * AI로 기술·기업·인재정보를 제공하는 'Tech-GPT' 구축(~'28),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등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9차 기술이전·사업화계획' 수립('25.下)
- 'R&D-표준화 이어달리기'를 통해 첨단분야 국제표준 40종 개발
- '제1차 세계표준포럼' 개최('25.12, 서울) 및 APEC 'AI 표준 포럼' 창설을 통해 국제 표준 리더십 확보

□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개선 및 쏠주기 지원 강화
 -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규제 공론화
 - 초기중견 보호 중심의 「중견기업법」을 성장지향형 지원 체계로 개편
- '투자, 산단, 생태계'의 3각축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확대(100→150억원/건),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 점검·추가지정 및 인센티브* 강화
 - * 특구 이전·창업 중소중견 기업상속공제 확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시도별 면적상한 미적용
 - 노후산단 환경개선('25년 2,200억원 투자), 문화선도산단 3개소 선정, 스마트그린산단 3개소 추가 지정
 - 14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23년 지정)의 혁신생태계 청사진 수립('25.3), 초광역권 연계 기술개발사업* 신규 추진
 - * (예) A광역권 내 대학 - B광역권 내 기업간 공동 R&D 추진 등

4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1 정책 여건

- 전력수요, 탄소중립 두가지 목표 동시 달성을 위해서는 무탄소전원 공급 확대 필요
 - 원전, 재생e의 균형있는 발전 필요
-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 수입하는 구조, 러-우 사태·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고려시 에너지 안보 확립이 긴요
- 최근 수소 사고로 인한 특단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복지의 중요성도 증대

2 대응 계획

- 에너지 핵심현안 중점 대응
 - 국회 보고를 거쳐 11차 전기본 조속 확정
 - *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협의, 공청회 既 완료 → 국회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예정
 -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
 - 민관 원팀으로 체코 원전 2기* 본계약('25.3) 체결을 완수하고, 추가 2기 확보(테플린 3·4호기)도 적극 추진
 - * '24.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두코바니 5·6호기 1,000MW x 2기, 약 24조원 규모)
 -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의 차질없는 추진
 - 조광제도 개편 등 제도개선* 반영하여 시추 이후 투자유치 본격 추진
 - * △수익성 비례한 조광료를 산정,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등
 - 전국 수소충전소(198개소) 대상 특별점검 실시(~'1.24),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가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25.上)

□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원전 건설·수출 등 일감 지속 확대('24. 3.3조원 → '25. 3.5조원),
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 착공('25.下),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재생 정부주도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태양광 국내 공급기반 강화방안*' 수립('25.上)

수소 '청정수소발전 입찰('25.上)'을 통한 청정수소 수요 창출 지속,
체계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수소사업법」 제정

○ 전력시장 진입단계의 가격경쟁 및 지산지소(地產地消) 촉진

용량시장 LNG 발전소 진입을 위한 용량시장 개설('25.下)*,
원전·재생·수소 등이 경쟁진입하는 무탄소용량시장 시범개설('25.下)
* '24.12월 시범 개설(1.1GW) → '25년 본격 운영(11차 전기본 연계 용량 등 확정)

RPS 개편 재생e의 복잡한 시장 진입경로를 경쟁입찰로 일원화
* 現 진입경로 : ①자체건설, ②REC 현물시장, ③장기 수의계약, ④경쟁입찰

전기요금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가격제 단계적 마련, 시간대별 수급
상황을 고려한 계시별 요금제 개선 추진(연내)

분산특구 지역 발전사의 지역 내 판매를 허용하는 특구 지정('25.2분기)

ESS 육지에 '배터리 ESS 중앙계약시장' 개설로 계통계약 완화
* ('23) 제주, 68MW 낙찰 → ('25) 육지로 확대

○ 다양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에너지바우처 중심으로 통합·효율화

IV.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기업 불확실성의 완화

· 범정부 공동 대응·민관 역할 분담으로 리스크 감소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상시 운영 + 민관 역할 분담 전략적 아웃리치

· 무역구제 역량 배가로 국내 산업 피해 예방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역대 최대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달성

· 수출 우상향 모멘텀 확보를 통해 수출 활력 유지

무역보험	수출애로 해소	수출마케팅
역대 최대 252조원 지원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新시장 유망품목 상호인정협약 확대 등	역대 최대 규모 전시상담회(305회) 무역사절단(12회)

·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25년 350억불 유치 목표

전략적 아웃리치	획기적 인센티브	APEC 연계 투자유치
외국상인·외투기업 간담회, 주요국 IR 활동	현금지원한도 상향(최대 75%), 관세감면기간 연장(5년→7년) 등	APEC CEO Summit, Invest Korea Summit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1호 팹 착공 ▶ 1분기

· 전기차/이차전지 사업 여건 개선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 1월중

· 공급과잉 업종

사업재편 청사진 제시

석유화학	철강
사업재편 본격 추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8분기)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예타 미무리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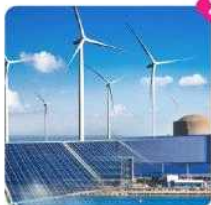
·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제조 현장 실증 투입

휴머노이드 R&D ▶ '25~'28년 1,000억원 이상 투자

·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산업 AX 모델' 제시

산업 AX 확산 전략 ▶ 1분기

· 바이오 산업에 AI 접목



에너지 안보 강화

· 전력망 건설기간 대폭 단축: 13년 ▶ 9년

·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

고준위 특별법 제정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 수소사업법 제정

· 통해 심해 가스전 성공적 개발로 석유/가스 공급망 강화